

선수금 운용 원칙은 왜 법률이 아니라 지침에 담기나

지침은 빠르게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만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붙는 제재는 법률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8월 24일 행정예고, 할부거래법의 선수금 보전·소비자보호 지침·시정조치 조항을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8.30	연번	2026_71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30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을 선수금 운용의 빈칸을 빠르게 메우는 내부통제 기준으로 본다. 동시에 지침의 문장과 법률상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은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지침을 정하게 하고, 확인한 제재 조항은 이 지침 위반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업자별 준수 여부를 볼 공시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규범은 생겨도 선택 기준은 생기지 않는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1천억원 이상 업체가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근거 조문은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권한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9월 14일까지이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운용 원칙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균형 있게 고려
내부통제	운용지침·연간계획	수립 요구
심의위원회	선수금 1천억원 이상	기준은 예고안
근거	할부거래법 제27조의3	자발적 준수 유도 지침
의견 제출	2026년 9월 14일까지	확정·시행 절차 남음
시장 규모	1,131만명·11조3,544억원	2026년 3월 말

개정안은 재화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운용지침과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요약은 1천억원 이상 사업자에게 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한다고 적습니다. 세부 보도에서는 운용계획의 이사회 보고와 고위험자산·지배주주 관련 거래 심의가 소개됐습니다.

2026년 3월 말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계약자는 1,131만명, 선수금은 11조3,544억원입니다. 개정안은 이 돈의 보전비율이 아니라 보전·보유된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절차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선수금 보전비율과 보전기관을 정합니다. 제27조의3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운용 원칙은 제27조의3 지침으로 들어갑니다. 법률을 고치는 것보다 행정예고와 확정 절차가 짧아 빠르게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법률이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한 의무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할부거래법 제39조의 시정조치 조항은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과 열거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7조의3의 지침 위반 자체는 확인한 열거에 없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재가 자동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침은 내부 의사결정과 감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계획과 심의 결과를 가입자가 확인할 공시, 미설치 사업자를 구분하는 표시와 이의절차는 예고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조·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돈을 먼저 낸 1,131만명의 계약자입니다. 선수금은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사업자가 보관·운용합니다.

법정 보전은 선수금 전액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운용지침은 나머지 자금까지 포함한 회사의 유동성·투자 의사결정이 지급 능력을 해치지 않게 하는 사전 장치입니다.

가입자는 계약서만으로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나 고위험자산 투자 심의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준수 여부가 공개되지 않으면 사업자 선택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설치 문구

최종 지침에서 심의위원회 설치가 요구인지 권고인지와 1천억원 기준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 가입자 공시

운용지침·연간계획·위원회 구성과 심의 결과를 가입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3 · 위반의 결과

지침 미준수에 대한 검사·시정·공표 절차를 별도로 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4 · 법령화

운용 원칙과 위원회 의무를 이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올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문을 확인하고 운용계획·심의 결과의 가입자 공개를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 가입한 업체에 운용지침, 회계연도별 계획과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 업체 폐업·등록취소 위험은 '내상조 찾아줘' 등에서 선수금 보전기관과 납입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최종 시행 전에도 운용계획과 이해관계자·고위험자산 심의 근거를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위원회 구성, 연간계획과 준수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내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당국	• 최종 문안에서 요구와 권고를 구분하고 미준수 때 확인·개선 절차를 함께 밝힙니다. • 가입자가 사업자별 준수 여부를 비교할 최소 공시항목과 법령화 일정을 제시합니다.

갈림길

운용 원칙이 지침에 머무르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 지위와 준수 공시·제재의 근거

A	B
지침과 자율 공시로 운영한다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준수 여부와 위반의 결과는 사업자 내부통제와 감독 관행에 크게 의존합니다.	법령상 의무로 올린다 검사·시정·제재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입법과 시행 유예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를 보면 아는가 · 9월 14일 뒤 확정되는 지침 문안과 후속 할부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사업자별 공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3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왜 예금은 금액으로, 상조 선수금은 비율로 보호하나](#) ↗

[넥서스 브리프 상조업체의 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왜 자본금의 50%인가](#) ↗

[금융제도 설명의무](#)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1차 · 운용 원칙·운용지침·연간계획·1천억원 이상 심의위원회 요구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8월 24일 자료(KDI 전재)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2	1차 ·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 지침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1차 · 선수금 보전과 시정조치의 법률 구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9조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 2026년 3월 말 계약자 1,131만명·선수금 11조3,544억원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6월 1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KDI 전재)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2차 · 위원회 심의 대상과 외부 의견 청취 내용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24일 보도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확정 지침에서 심의위원회 문구와 1천억원 기준, 가입자 공개항목, 미준수 확인절차와 후속 법령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수금 보전기관 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